

# “정세균 국무총리 방문 장점마을 치유 신호탄”

민주 김수홍 의원 “피해 회복 위해 국회 차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기울일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익산 장점마을 찾아 피해 주민들께 사과와 위로로 건넸다. 지난 24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집단 암 발병 사태 발생한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을 전격 방문했다. 장점마을을 전격 방문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장점마을을 사태 해결을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 서서히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총리를 만나 설득하는 한편, 국정감사 기간에도 정부를 상대로 장점마을 사태 해결 의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날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에 도착한 정 총리는 일부 피해 주민 및 민관협의체 대표를 만나 그간의 고통을 위로했다.

당초 마을 방문이 계획됐으나, 위기 단계가 격상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부 주민만 참석할 수 있었다. 정현을 익산시장의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정 총리는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익산시의와 전북도의 노고를 치하하며 “주민들의 고통을 가능하게 하려면 개인적으로 무척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특히 정부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해 정부 차원의 지원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장점마을주민대책위 최재철 위원장은 “농촌진흥청이 집단 암 발병 원인인 연초박을 최근에서야 쓰지 못하게 했다”며 “전북도와 익산시가 피해배상 소송 조정에 소극적인데,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장점마을 참사대책 민관협의체는 정부 지원사업 추진, 관련 법령 정비, 피해배상 조정 중재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제안서를 정 총리에게 전달했다. 주민 A씨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진을 정 총리에게 전하며, 살아가고 있도록 정부가 도와달라고 호소하자 정 총리는 아픔에 공감하며 따뜻하게 위로를 건네기도 했다. 김수홍 의원은 “정세균 총리의 방문으로 장점마을의 치유와 회복이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민사조정외 원만한 해결 및 장점마을 치유회복센터의 국비 지원을 부탁하며, 저 역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지난 24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집단 암 발병 사태가 발생한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을 전격 방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수홍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 도내 기초의회 의정 소식



#### 전주시의회 시정연구회 지방예산분석실전 세미나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시정연구회(회장 박선전 의원)는 25일 전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방예산분석기법 등 의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주시 지방예산분석실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포스트코로나시대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전주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의 역량강화와 의사국 직원의 직무 향상·의정지원 등 실용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전주시 재정분석 지표 값을 중심으로 단계적 개선지표를 통한 재정관리 방향을 제시했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지방재정 육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의견을 모았다. /김윤성 기자

## “지역 감염 확산 막기 위한 방법은 오직 마스크 쓰기”

민주 도당,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따라 '호소'

청정지역이라 믿었던 전북도내 코로나19감염 확산이 심상치가 않은 상황이다. 25일 현재 도내 확진자 수는 257명으로 지난 18일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은 25일 전북도민과 당원들에게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 동참을 호소했다. 전북도당은 “현재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여러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감염원을 파악할 수 없는 n차 감염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3차 대유행을 예고하며, 국민들께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고 ‘전북도 역시 도내 전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도당은 호소문을 통해 불필요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크리스마스, 연

말 모임 역시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도 꼼꼼히 지켜주기”를 부탁했다. 특히,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과 비슷한 증상을 보일 경우 망설이지 말고,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를 갖춘 병원을 방문해 신속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바이러스는 이미 우리 일상 가까이에 와 있고, 지금은 그 어떤 곳도, 그 누구도 감염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면서 “오직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만이 우리의 일상을 되돌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역 수단이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실마” 하는 생각은 잠시 멈춰줄 것”이라며 “정정지 역 전북을 되찾기 위해 도민과 당원 모두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을 실천하자”고 거듭 호소했다. /유호상 기자

#### 전국시도회의의장들,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촉구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 의장단이 농작물재해보험의 품목 확대와 보상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는 25일 대구광역시 호평인터뷰홀에서 2020년 제6차 임시회의를 열고,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제안한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송지용 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기상이변 등으로 매년 농작물 재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상품목과 보상기준

등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농민 피해 최소화화와 농가 경영안정 등 농작물 재해보험의 공익적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장은 특히 “농작물재해보험이 특정위험보장방식이어서 올해처럼 긴 장마로 농작물피해를 입었더라도 특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피해보상률도 올해 초 80%에서 50%(3년간)로 보험금 수령실적이 없으면 70%로 하향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의회 상임위 예산 심사

##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후관리 철저”

#### 농산경위, 농축산식품국 예산 심사

전북도의회 농산경계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25일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 및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농축산식품국 2021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042억 1,251만원보다 1,499억 4,312만원이 증가한 6,541억 5,563만원 규모로 편성됐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628억 6,827만원보다 1,557억 1,870만원이 증액된 9,185억 8,697만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농산경위, 농축산식품국 예산 심사에 참여한 의원들은 심사과정에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 예산 낭비요인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철수 의원(정읍1)은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있어 여성 농업인의 출산 전·후 영농 및 가사에 도움을 주는 좋은 사업임에는 분명하며, 자부담이 있어 농가에 부담이 되므로 자부담을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9)은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지난

2018년부터 지원되고 있는데, 청년 창업농들과 관련된 다른사업들을 포함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청년 창업농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미 농촌 마을회관 등에 고장나거나, 방치돼 있는 의료 보조기구가 많이 있는 상태에도 지원을 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하며 “다른사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전북 1000리길 길 문화관 사업 원점 재검토해야”

#### 한북위, 환경복지국 예산 심사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25일 2021년도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명연 위원장(전주 11)은 “익산 폐석산 복구지 불법 매립폐기물 조차명령 미이행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조속히 추진하고, 폐기물 적정처리 및 침출수 등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방지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전북 1000리길을 홍보하기 위한 대한민국 길 문화관 조성사업이 당초 100억원 사업에서 51억원으로 축소된 사유와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해 묻고, 1000리길 사업을 통한 길 문화관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병철 의원(전주 5)은 “김제용지, 혁신도시, 서부신시가지 까지 많은 도민들이 축산악취로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하며 “매년 악취 저감을 위한 예산을 세우고 있음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축산 악취저감을 위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대오 의원(익산1)은 “쓰레기 투기지역에 감시 카메라 설치와 생활쓰레기 분리배출시설 설치로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단속을 함께 추진해 예산 효율성 제고 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만기 의원(고창 2)은 “농약빈병 및 빈병지 등을 수거해 재활용을 위한 사업은 수거 처리비를 지원하

고 있지만, 플라스틱 농약병 및 빈병 등 재활용 불가 폐기물은 수거되지 않고 있는 농촌 현실을 반영해 이에 대한 예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나기학 의원(군산 1)은 “새만금개발에 따른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근 마을의 피해가 큰 상황임을 지적하며, 새만금 육화에 따른 미세먼지 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전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황영석 의원(김제 1)은 “지난 2018년부터 전라도 전년을 기점으로 전북 1000리길을 선정, 생태도 및 쉼터 조성을 통해 탐방객을 유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생태관광 수요 창출 효과 등 기대효과가 불투명함을 언급하고, 관광 창출 효과가 불투명하다면 예산낭비로 귀결되는 만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 “친일잔재 청산 속도 붙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 행자위, 자치행정국 예산·추경 심사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25일 제377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자치행정국 소관 등 2021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문승우 위원장(군산4)은 “불필요한 경성경비 지출을 줄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지난 2018년 정부합동감사에서 페널티를 받아 올해 지방교부세 5,800만원이 감액됐는데, 추후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김이재 부위원장(전주4)은 “출산

및 육아 휴직자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기간, 임금 등 차이가 각기 다르다는 이유로 부서별로 세웠던 2020년도 예산안, 효율성 차원에서 총괄업무 수행하는 인사부서가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내년 범죄피해자 지원 및 범죄예방 사업의 경우 총괄센터가 아닌 전주 소재 기관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는데, 각종 사업추진기관 선정 시 지역, 사업성적, 효과 등을 고려한 명확한 선정근거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근 의원(정수)은 “도청 중요보직은 유능한 인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직위공모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한 자리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경우 발생하는 부차용들이 있으므로 살상기관을 포함해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서경찬 의원(고창1)은 “다양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친일잔재 청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1차 용역 결과대로 실현되는 것이 목표이므로 기초자치단체와 지속적인 협의 및 협력을 통해 친일잔재 청산에 속도가 붙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 “아태 마스터스 예산 재검토를”

#### 문건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사

전북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정민)는 25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했다. 최영규 의원(익산4)은 “2022년 아태마스터스대회가 2021년 일본 월드컵마스터스 연기에 따라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행사개최 준비로 요구한 5억여원이 넘는 예산은 대회 일정의 연기나 취소 여부가 명확하게 결정된 이후에 편성하고 사업추진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한 국제협력사업비와 홍보사업비는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간사아과 리우에 대표단을 참가시키기 위해 편성한 국제협력사업비 1억원의 전액 삭감을 촉구했다. 조동용 의원(군산3)은 “문화관광재단 신규사업인 뉴미디어창작 지원사업에 대해 문화예술 융합과 관련된 비슷한 사업은 이미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도 하고 있다”며 “새롭고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다면,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에서 확장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문제제기로 지적했다. 김명지 의원(전주8)은 “토탈관광 정책홍보 사업 예산이 8년째 해마다 같은 내용으로 편성되고 있고, 현재까지 예산은 총 30억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 “환경문제 인식 교육 지지부진”

#### 교육위, 도교육청 예산 심사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지난 24일부터 도교육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정수(익산2)의원은 학생안전교육을 위한 조형물 설치금액을 편성한 것에 대해 “안전교육 시설물 설치도 아닌 조형물에 2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구상하고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식(군산2) 의원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놀이 공간 조성사업이 집행과정에서 특정업체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강용구(남원2) 의원은 “학생 관련 사업은 대폭 삭감된 경우가 많은데 교과연구회 등 교사 관련된 예산은 소폭 삭감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교과연구회 등 교사관련 예산지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구했다. 이어 “교과연구회 및 동아리 지원사업의 경우 식비사 용액이 지원금의 50%까지 사용 가능하기에 관련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 박희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며 매년 관련 교육 마련을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